

통찰과 공력으로 빛은 큰 자산

김건우*

[서평] 황병주(2026), 『박정희 이데올로기』,
돌베개, 624쪽

1. 저자의 박람강기(博覽強記)

저자인 황병주 선생은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이라는 논문으로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황병주 선생의 박사논문이 나왔을 때, 한 부를 구해 제본하여 동료 연구자들과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필자가 속한 국문학계와 달리 국사학계에서는 해방 후 현대사, 더구나 박정희 시대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가 드물었다. 이 시대를 다루는 박사논문은 희귀했고, 황병주 선생의 박사논문은 금방 연구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본 저작이 출간되었다. 처음에 책을 훑어보면서 이내 두 가지를 알아챌 수 있었다. 하나는 이 책이 그 오래 전의 박사논문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저작이라는 점, 또 하나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저자가 일관되게 ‘박정희’를 붙들고 있었고 이번에 그 결정판이 나왔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 책은 그의 연구 인생의 집약체이다.

일반적인 서평의 형식으로는 책의 내용과 구성을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지 모르나, 나는 이 책에서 받았던 인상적인 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전공 교수

다.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박람강기(博覽強記)라는 단어 외에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국내 역사학자가 쓴 책이 맞는지 싶을 정도이다. 철학, 문학, 사회학을 가로지르는 깊은 통찰로 가득하다.

이 책에는 철학이 있고 정신분석학이 있다. 단순히 이 책이 철학자 라캉의 ‘상징계’라든가 ‘대문자 타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예컨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1961년, 박정희가 도쿄에서 기시 노부스케를 만나 나눈 대화 부분을 보자. 박정희는 기시에게 과거 일본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자신이 경험한, ‘빈타’라는 일본군 훈육방식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빈타’ 교육이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로 상대방의 따귀를 때리도록 명령하는 폭력적 훈육방식이다. 저자는 이 빈타의 효과를 분석한다.

“빈타는 피해-가해의 고정된 위치를 교란해 주체의 자기분열을 유도한다”, “(명령을 따랐을 뿐으로,) 면책된 가해의 주체들은 동시에 무고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빈타는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주체성을 삭제하고 외부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전쟁기계를 만드는 과정이다”(98-99쪽).¹

이 문장들을 음미하면서 얻는 통찰이 있었다. 역사학 분야에는 거듭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의 역사학자가 자신의 저서나 논문에서 이런 철학적 분석을 하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저자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깊은 식견을 보인다. 1970년대 박완서 소설들을 통해 저자는, “시장의 자유주의 통치성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규율하고 있는가”(241쪽)라는 문제에 대해 십여 쪽에 걸쳐 상세히 분석한다. 저자는 말한다. “박완서의 1970년대 글쓰기는 자본과 화폐의 통치성이 어떻

1 이하 본문에서 인용하는 황병주(2026), 『박정희 이데올로기』(돌베개)의 출처는 내주로 표기한다.

게 개인의 삶을 관장하게 되었나에 대한 세밀한 보고서다”(253쪽).

저자의 문학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박완서 한 작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가져와, 광장과 밀실의 메타포를 활용하여 여의도와 강남 개발을 설명하는 대목은 박정희 통치성의 공간 규율을 다루는 백미이다. 광장과 밀실을 통한 체제 통치성의 공간 규율화를 설명하면서, ‘광장’의 의미를 여의도 광장으로, ‘밀실’의 의미를 아파트로 유비하는 대목은 감탄이 나오게 한다. 광장을 통한 군중정치는 파시즘과 군사적 통치성으로, 아파트의 밀실은 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광장과 밀실은 은유이자 실체다”(263쪽). 정교하다.

황병주 선생의 역사학에는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다. 당연히 사회학도 있다. 사유의 폭이 매우 넓은데 또한 적확하고 날카롭다. 박람장기, 깊은 통찰력, 이런 말로밖에는 표현하기가 힘들다.

2. 구성과 내용, 책이 취한 전략

책의 내용을 따라가 본다.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박정희 그를 만든 시대와 역사」, 제2부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제3부 「박정희 체제의 이데올로기 파시즘에서 자유주의까지」로 명명하고 구성했다.

눈에 띄는 것은 우선 1부이다. 독자들은 언뜻 1부를 단순한 평전으로 오해할지 모른다. 물론 1부는 글의 형태상 일종의 평전처럼 보이기는 한다. 박정희 생애를 탄생부터 쿠데타까지 연표로 놓고 주요 사건 중심으로 분석하는 형태를 취했다. 국내 평전들은 많은 경우 생애 자체를 재구성하고 재서술한다. 그런데 이 책이 의도한 것은 박정희라는 개인의 형성을 넘어 이 문제적 인물을 낳은 시대적 맥락을 재현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1부의 내용은 평전이라기보다, 박정희라는 개인의 신체에 각인된 ‘시대감각’에 가깝다.

그래서, 조갑제나 전인권 등이 저술한 기존의 박정희 평전과는 어떻게 달리 서술한 ‘평전’일까 생각한다면 이 책을 오해한 것이다. 이 책은, 박정희라는 한 인간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저자는 말한다. “한 인간이 어떻게 시대를 닮아가는가”(30쪽). 요컨대 박정희라는 인간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되, 유년부터 쿠데타에까지 이르는, 그를 만든 시대를 분석하고 이를 인물의 정신구조와 유비하는 방법을 취했다. 저자는, 시대정신이 박정희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분석한다(31쪽).

저자는 자신의 방식이 기존의 박정희 평전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 박정희의 평범치 않은 삶을 유년으로부터 설명하려는, 즉 “발생론적으로 남다른 가치와 자질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기존 평전들의 서술상의 특징이며, 따라서 그 평전들이란 “개체의 특이성”에만 주목한다고 평했다(32쪽). 저자는 오히려 박정희라는 인물은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 환경의 산물”(33쪽)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일반적 환경”이 개인에게 각인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분석해 낸다.

물론 1부가 평전 형식인 이상, 개인 박정희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저자는 박정희가 유년기와 청년기에 가졌던 ‘힘’에 대한 추구 성향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성향을 에피소드 형태로 해소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과 결합한다. 예컨대 사춘기 이후 박정희의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을, 이승만이 느꼈던 미국 기독교의 힘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확실히 박정희가 성장하던 1930년대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기독교란 ‘별 볼일 없는’ 존재였다. 그 시기의 ‘힘’이란, “학교의 위력, 일본인의 위력, 일본군의 위력, 요컨대 대일본제국의 현실적 위력”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의 소년기란, “제국 일본의 국민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소년의 성장기”가 된다(47쪽).

또 저자는 말한다. “(해방 후 한국이라는) 탈식민 사회의 민족주의는 군사주의와 파시즘,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가 뒤섞여 복잡다단한 이데올로기

적 효과를 내뿜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잉 주체화된 박정희가 탄생한 것이다”(151-152쪽). 그렇지만 저자는, 이런 현상을 박정희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지 않는다. 1920년 전후에 태어난 이 세대 자체가 “‘군’의 힘을 알고 믿게 된” 세대이며, “‘군’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온” 세대였다(150쪽).

사실 박정희의 과잉 주체 의식은 그 세대의 특성이라고 봐야 한다. 이 세대는 한국인 최초로 근대적 군대를 경험한 세대이다. 세계적인 전쟁의 시대에, 총을 들고 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확실히 체화한 ‘남성들’이었다. 박정희 개인을 넘어 이 세대를 이해하는 데 핵심 중 하나는, 전쟁과 함께 성장하여 다수가 군인으로 참전한 세대라는 점이다. 제국의 군대에 속하든 광복군이나 조선의용군에 속하든, 해방 당시 이들은 ‘군인’이었다. 이들 세대는 군인 주체라는 성격과 국가에의 욕망을 공유한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연결하는 과잉된 자의식은 박정희 개인의 성향을 넘어 이 세대 엘리트 남성들의 의식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대적 맥락과 인물의 성향을 결합하는 서술이란 정말 어렵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낸 바탕에는 저자의 ‘내공’이 있다. 그래서 제1부는 국내 저자의 평전으로서는 보기 드문 학술적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의 제1부가 자체로 국내 평전 서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한다.

책의 제2부는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을 다루고 있다. ‘체제의 통치성’이란 무엇이며, ‘체제의 이데올로기’(3부)와는 어떻게 다른가. 독자로서 범박하게 이해하자면, 통치성이란 통치 주체의 의도나 행위를 넘어서 통치의 성격으로, 정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체로 작동하는 힘들, 상수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미국이나 시장과 같은, 해방 후 한국이라는 신생 자본주의 국가의 절대 상수들과 함께, 정신성이나 대중 심리와 같은 저변의 변수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으로 보인다.

저자는 제2부 5장 국가와 시장의 통치성 서두에서, 통치성 개념에 대해 푸코를 끌어와 “권력의 주체 구성 전략”이라고 설명한다(209쪽). “전략”이

라는 표현에는 주체의 의도가 비쳐있어 다소 의미가 애매해 보이지만, 나는 이 통치성 개념을 ‘권력이 작용하는 장의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통치성이란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통치의 구조적 성격으로서 통치의 ‘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 통치성에는 반드시 “미국”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절대 상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체제 18년은 팩스 아메리카나 한복판에 위치했으며 그 시작과 끝, 즉 5·16과 10·26 모두 미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160쪽). 박정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의 압도적 위력을 인정한 이상 한국의 종속성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180쪽). 그럼에도 “박정희가 미국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호의를 표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182쪽). 박정희는 미국이 ‘싫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미국은 박정희도 어쩔 수 없는 통치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저자가 제2부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의 첫 장으로 ‘미국 해계모니’를 다룬 것은, 미국이야말로 박정희 체제 통치성의 절대 상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2부 통치성 파트를 3부의 체제 이데올로기와 구분해 서술한 의도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자가 분석하듯이, 확실히 1970년대에 들어 통치의 조건으로서 국제 질서상의 미국 해계모니의 약화가 일어났을 때, 자주성 담론이라는 유신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194쪽) 통치성과 이데올로기는 전혀 다른 범주이면서 동시에 연동되어 있는 개념인 셈이다. 저자는 이런 조건 상수와, 체제와 담론 이행의 단계를 참 섬세하게 서술했다.

그럼에도 통치성 파트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저자 서문에서,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을 나누어 “군사적-파시즘적 통치성”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있다(11쪽). 저자는 프롤로그의 다른 부분에서, 박정희 체제 통치성의 “주축은 위로부터의 군사적 통치성과 아래로부터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해,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군사적 자유주의’”라고 이름 지었다(21-

22쪽).

독자들이 프롤로그에서 처음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의아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박정희 체제가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축으로 한다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더구나 ‘군사적 자유주의’라니, 저자가 혹시 일반적 역사 해석과 다른 관점을 무리하게 들이치는 것은 아닐까.

마음에 걸리는 표현을 일단 밀어놓고 찬찬히 책을 살펴보자.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미 자유주의를 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정치적 자유주의(같은 시기 민주화운동의 이념이기도 했던), 그리고 다른 하나를 “시장의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정치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와 구분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진부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체제 이념의 근본으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런데, 어째서 국가-민족의 유사 파시즘적 성격을 지녔던 박정희 정권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치성의 한 축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 자본의 운동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곧 납득이 된다.

저자는 ‘유신체제하 자유주의는 극히 위축되었다’는 것이 통념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일본 마르크스주의자 도사카 준을 끌어와 두 개의 자유주의를 다시 개념화한다.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사회 상식’으로서의 자유주의다.” 이 ‘사회 상식’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참으로 흥미로운 개념인데, 이것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경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박정희 시기 경제개발은 결과적으로 능력주의와 무한 경쟁을 사회 상식으로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체제는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가운데 정글의 자유를 풀어놓은 셈이라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박정희 체제는 군사적 통치성과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상관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통치성이란 군대와 시장이 결합된 통치성이 된다(226-228쪽). 그러나 최종 심급은 시장에 있다.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이념이었던 민족적 민주주의조차 ‘소유권의 민주주의’, ‘사회 상식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었다. 박정희가 어떻

게 하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이야기이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자본, 즉 운동하는 화폐다”(239쪽).

결과적으로,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체제는 군사적 통치성과 자유주의 통치성의 혼종이나, 뒤로 갈수록 시장의 자유가 확산되는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210쪽). 그래서 기묘하게도 유신체제에서조차 “이미 삶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시장의 문법이지 국가의 슬로건이 아니다”(533쪽).

통치성의 구조와 변화로 새마을운동도(박정희 시기를 말하면서 생략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설명될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문제를 던진다. “새마을운동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하나 있다. 이촌향도가 그것이다. 그렇게 성공적인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을까?”(309쪽) 새마을운동은 농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이라는 주체 위치의 시선에서 전개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대중에게 ‘성공’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의식의 ‘가스라이팅’이 가능했다. 통치 이념과 대중의 의식이 빈틈없이 결합할수록 파시즘이 성립할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배후에는 파시즘이 있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새마을운동 시기, 농업과 농촌에 정부는 ‘돈을 쓰지 않았다’. 결국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인 ‘자조’의 의미는 “알아서 잘해보라는 소리와 다름없었다”(325쪽). 새마을운동은 시장의 통치성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임을 저자는 정교하게 논증한다.

3. 약간의 이견,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서평은 황병주 선생의 저서에 대한 상찬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서평자의 임무란 게 있으니 이견 한 가지 정도는 제기해 보기로 한

다.

1963년 민정 이양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박정희 측이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원과 의미 문제인데, 저자는 그로부터 14년 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안호상이 주도적으로 구상했던 일민주의를 그 기원으로 보는 듯하다. 저자는 말한다. “쿠데타 세력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일민주의로부터 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91쪽). 요컨대 저자는 1960년대 초중반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안호상의 파시즘 사상과 1970년대 유신 체제의 파시즘을 연결하는 매개로 보는 듯하다.

사실 안호상이 이승만 정권 초기에 사용하던 ‘민족적 민주주의’는 파시즘 사상의 언어라는 점에서 훗날 박정희 정권의 체제 특성인 파시즘적 성격과 이어지는 면이 있다. 저자가 두 ‘민족적 민주주의’를 14년의 시간차를 넘어 연결할 때에는 그 점에 착안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실제로 1963년경 일부 지식인들이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가 극우 파시즘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388쪽).

그렇지만, 동시대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저자의 관점에 의문이 생긴다. 1961-1964년에는 민족주의 개념 자체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혼종 상태에 있었다.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1964년, 대학생들은 정부의 한일 회담 양상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길래 애초에 기대감을 품었던 것일까.

나는 박정희 정권 초기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철저히 당대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당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에는, 앞서 언급한 파시즘에의 우려 외에도 다양한 기의가 따라붙었다. 1963년 대통령 선거가 박정희 측의 승리로 끝난 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

승면은 「박정권의 민족주의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위치를 문제 삼으며, “민족적 민주주의 가운데는 1960년 12월 모스크바 81개국 공산당회의 선언 취지를 따르는 ‘민족적 민주주의’도 있다.”라고 했다.² 이에 대한 대답의 형식이 황용주의 1964년 글(세대지 필화사건이 되었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이었다. 황용주의 입장은 중립화통일론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 글이 결국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다. 정치학자 이완범은 세대지 필화사건을 박정희 세력 내 반미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반공주의자들의 반격이라고 해석한다.³

요컨대, 1963년을 전후한 몇 년은 모두가 민족주의를 말했지만 피아가 가려지지 않은, 도무지 구분이 힘든 혼종의 상태 자체였다. 그럼에도 이 무렵의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955년 반동회의 이후 전개되던 제3세계 탈식민주의와 비동맹 노선의 움직임이다. 이것이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가 놓인 담론적 배경이다. 당대 맥락을 떠나 해방기와 건국 초기로 이념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덧붙여, 서술상의 아쉬움 한 가지도 얘기하고 싶다. 책의 제3부는 저자의 박사논문과 약간의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으로, 체제의 이데올로기 즉 국가의 지배 담론이면서 대중을 움직이는 허위의식을 다룬다. 저자의 학위논문에 바탕을 두고 서술한 만큼, 내용이 ‘단단하다’.

그런데, 단단하다는 것은, 달리 보면 일반 독자들이 소화하기에 ‘딱딱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좋은 책을 연구자들 외에 더 많은 독자가 보았으면 하는 필자의 마음에서 이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저자가 학위논문의 흔적을 더 지웠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부드럽고 친절했으면 좋

2 홍승면(1963), 「박정권의 민족주의란?」, 『사상계』 1963년 12월호, p. 81.

3 이완범(2015), 「1964년 『세대』지 필화사건과 황용주」, 『21세기 정치학회보』 25-1, 21세기정치학회, p. 59.

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군사적 자유주의’를 다루는 제3부의 마지막 장에 와서는 다시 1부와 2부의 서술 톤을 회복한다).

제3부 서술과 검토에 저자의 난감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학위는 문을 활용하여 단행본으로 재서술하는 모든 저자들이 가지는 난감함이다. 이런 일에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든다. 여기에 지나치게 공을 들이다 보면 출간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 언급한 정도는 ‘옥에 티’ 정도도 못 되고, 그 보다는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우리 학계가 박정희의 시대를 다루는 대단한 학술적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한다. 주제 넘게 감히 말하자면, 앞으로 본 주제에 대해 이 노작을 뛰어넘는 책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완범(2015), 「1964년 『세대』지 필화사건과 황용주」, 『21세기 정치학회보』 25-1, 21세기정치학회.
 홍승면(1963), 「박정권의 민족주의란?」, 『사상계』 1963년 12월호.

